

민주당 최고위원 3명 공석… 다음달 11일 보궐선거 관심

전현희·김병주·한준호, 내년 지방선거 출마 위해 사퇴
강득구·이건태 도전 가능성…부산출신 유동철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이른바 '명청'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대결 양상으로 치닫으면서 친이재명 주자의 선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고위원 6명 중 3명을 다시 뽑는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에 친명 인사들이 대거 포진할 수 있어 내년 지방선거 등에 친명 진영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인 2표제'로 치러지는 이번 최고위 선거 터에 친명 진영에서 조직적인 투표에 나선다면 "2명 이상의 친명 주자의 당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친명과 정 대표 측의 치열한 공방 전도 예상되고 있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고위원 선출 방식 등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1일께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궐선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치러진다.

임기가 내년 8월까지로 제한적이지만 내년 지방 선거의 공천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당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지도부로서 권한도 막강하기 때문에 당내 권력 이동을 위한 물밀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이며 친명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내년 당권 도전이 가시화되면서 당 대표 경선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원 보궐 선거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이 당 대표 당시 영입한 친명계 인사인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출마했고, 원내에서는 친명계 인사인 강득구·이건태 의원의 도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 위원장은 9일 이날 국회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중앙위원회의 1인 1표제 부결은 절차 부실, 준비 실패, 소통 부재의 결과"라며 "당원들을 직접 만나며 목소리를 듣고 함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정 대표 측에서는 조직사무부총장인 문정복 의원, 당 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과 이성윤 의원 등이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도 한 명이 두 표를 행사하는 최고위 투표 방식 때문에 특정 친명의 인사 2명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청 양 진영의 조직적 투표가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그동안 당내 경선에서 친명 진영의 조직력이 탄탄했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2명 이상의 친명 주자가 당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내년 8월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따라 다음 총선 공천권이 결정되기 때문에 친명 국회의원도 보궐선거에 개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원 6명인 최고위원회에 2명의 친명 정치인이 추가 투입된다면 모든 당 결정 과정에 친명 진영의 입장이 투영될 수 있다.

특히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3명의 최고위원 중 1명은 사실상 친명 진영으로 분류되고 있어 이번 보궐선거에서 2명의 친명 정치인이 최고위에 입성하면 '명청 간 최고위원 숫자'는 3:3 구도가 될 수 있다. 최고위 숫자가 동일할 경우, 내년 지방 선거 과정의 모든 결정에 친명의 입김이 작용하고 8월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도 친명의 영향력도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지방선거 경선을 위한 각종 위원회 구성을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플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국회 필리버스터, 발목 잡기 넘은 민생 탄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입장에 앞서 열린 국민의힘 규탄 시위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구복규 화순군수 "당원권정지, 재심 통해 소명"

"당사자 소명 과정 빠져 절차상 문제" 공식 대응 예고

구복규 화순군수가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자신에게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공식 대응을 예고했다.

구 군수는 9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아직 중앙 당으로부터 징계와 관련된 어떠한 공식적인 문서나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징계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 소명을 듣는 절차가 빠져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적으로 윤리심판원이 열리기 위해서는 시전에 당사자에 대한 조사나 소명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결정은 별도의 조사 절차 없이 윤리위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식 통보가 도착하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재심을 신청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 최종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8일 구 군수에 대해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당원 자격정지 2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안이 최종 확정되면 구 군수는 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돼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구 군수 외에도 전남도당 소속 입후보 예정자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다.

중앙당은 군수 입후보 예정자 A씨와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불법 당원 모집과 관련해 각각 당원 자격정지 2년과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플록 기자 kroh@kwangju.co.kr

과방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17일 청문회

1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 초대 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오는 17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16일에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과방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 청문회 및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번 일정 확정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도출한 합의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식 주인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쿠팡 청문회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쿠팡의 실질적 경영 책임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대표이사를 포함해 총 5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기술적, 관리적 쟁점을 다루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 5명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장의 증인 출석 여부와 개인정보 관리 부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 청문회 하루 전인 16일에는 김종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김 후보자는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초대 수장으로 지명된 만큼, 방송·통신 정책 전반에 걸친 자질 겸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과방위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위해 전문형 전국 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을 비롯한 3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언론계 주요 현안과 노사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청문회 과정에서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관계자는 "이번 일정과 관련해 여야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오플록 기자 kroh@연합뉴스

정진욱 "장동혁, 광주시민 고소 사실 없어"

국립 광주시당 "공개 사과 환영"

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하게 맞섰다.

하지만 정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자료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의원은 광주시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장동혁 대표에게 공개 사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18 묘지 참배 과정에서 항의한 광주시민을 고소했다"며 당 차원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

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하게 맞섰다.

하지만 정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자료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의원은 광주시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장동혁 대표에게 공개 사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18 묘지 참배 과정에서 항의한 광주시민을 고소했다"며 당 차원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

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하게 맞섰다.

하지만 정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자료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의원은 광주시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장동혁 대표에게 공개 사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18 묘지 참배 과정에서 항의한 광주시민을 고소했다"며 당 차원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

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하게 맞섰다.

하지만 정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자료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의원은 광주시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장동혁 대표에게 공개 사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18 묘지 참배 과정에서 항의한 광주시민을 고소했다"며 당 차원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

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하게 맞섰다.

하지만 정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자료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의원은 광주시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장동혁 대표에게 공개 사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18 묘지 참배 과정에서 항의한 광주시민을 고소했다"며 당 차원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

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하게 맞섰다.

하지만 정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자료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의원은 광주시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장동혁 대표에게 공개 사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18 묘지 참배 과정에서 항의한 광주시민을 고소했다"며 당 차원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

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하게 맞섰다.

하지만 정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자료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의원은 광주시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장동혁 대표에게 공개 사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18 묘지 참배 과정에서 항의한 광주시민을 고소했다"며 당 차원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

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하게 맞섰다.

하지만 정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자료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의원은 광주시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장동혁 대표에게 공개 사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18 묘지 참배 과정에서 항의한 광주시민을 고소했다"며 당 차원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

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하게 맞섰다.

하지만 정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자료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의원은 광주시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장동혁 대표에게 공개 사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18 묘지 참배 과정에서 항의한 광주시민을 고소했다"며 당 차원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

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하게 맞섰다.

하지만 정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자료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의원은 광주시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장동혁 대표에게 공개 사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18 묘지 참배 과정에서 항의한 광주시민을 고소했다"며 당 차원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p